

김대중 독주 속 이정선 중심 단일화 ‘최대 변수’

전남·광주 통합교육감 선거 D-49

현직 시·도 교육감 등 교육계 인사 8명 예비후보 등록 전교조 출신 장관호·정성홍 단일후보 선출 여부 촉각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이라는 거대 물결 속에서 치러지는 통합특별시교육감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판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지난 10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공식 선거전에 합류하면서, 총 8명의 후보 간 세 대결과 정책 경쟁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모습이다.

현재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인사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강숙영 전 전남도교육청 장학관, 고두갑 목포대 교수, 김해룡 전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 장관호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최대욱 전 한국교총 부회장 등 8명이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교육 수장 선출을 넘어 통합 이후 광주·전남 교육체제의 방

향을 결정짓는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정통합으로 교육 행정 역시 하나의 틀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 간 균형 발전, 미래 인재 양성 전략 등 굵직한 과제들이 한꺼번에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특히 도시와 농산어촌 간 교육 여건 차이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선거의 중심에는 김대중 전남도교육감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현직 맞대결’이 자리 잡고 있다.

김대중 교육감은 최근 광주 상무지구에 선거캠프를 마련하고, 15일 광주와 전남에서 출마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교육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남교육수당, 미래형 교실 구축 등 기존 정책 성과를 기반으로 통합 교육 완성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정선 김대중 강숙영 고두갑 김해룡 장관호 정성홍 최대욱

이정선 후보는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광주·전남 전역을 오가며 ‘교육 대전환’ 전략을 내세워 지지 기반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두 현직의 경쟁은 경험과 성과, 그리고 통합 이후 리더십을 둘러싼 평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자구도 속에서 단일화 여부는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정선 후보 측은 정책 연대를 축으로 세 확장에 나서고 있다. 김해룡 전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고두갑 목포대 교수 등과의 협력 가능성이 거론되며, 지역별 기반을 연결하는 전략이 구체화되는 양상이다.

이는 광주 중심의 지지 기반을 전남·동

서부권까지 확장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다만, 연대 대상으로 거론되던 강숙영 전 전남교육청 장학관은 단일화에 선을 긋고 원주의 지지를 밝히며 독자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전교조 출신인 정성홍·장관호 후보도 14일 100%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 합의하고, 조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진보 진영의 결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각 후보들의 현장 행보도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김해룡 후보는 광주와 순천에서 잇따라 출마 선언을 준비하며 정책 메시지 확산에 나섰다. 고두갑 후보와 최

욱 전 한국교총 부회장 역시 교육 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앞세워 지지층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선거가 단순한 인물 경쟁을 넘어 조직력의 대결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합으로 선거 권역이 크게 넓어진 만큼 선거 비용과 인력 동원 부담이 커졌고, 이는 후보 간 연대나 중도 사퇴 등 추가 변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전략적 결합이나 후보 재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역별 유권자 구성 역시 선거 판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요소로 꼽힌다.

광주와 전남은 지역 특성과 교육 환경이 다른 만큼, 각 후보가 제시하는 정책이 어느 지역에서 더 큰 공감을 얻느냐에 따라 득표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도시 지역에서는 미래 교육과 산업 연계 인재 양성 정책이,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교육 접근성과 교육 복지 확대 정책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특별시의 교육 체계를 설계할 책임을 맡는 이번 선거는 남은 기간 동안 단일화와 정책 경쟁이 맞물리며 한층 치열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수 기자 jminu@gwangnam.co.kr



더불어민주당 ‘착!불 공약 프로젝트’ 6·7호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정정래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착!불 공약 프로젝트’ 6·7호 공약 발표 행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曁

광주시, 태양광 전기로 수돗물 생산

전국 첫 탄소중립 상수도 모델 구축

광주시가 정수장 유희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수돗물을 생산하는 탄소중립 모델을 전국 최초로 구축해 관심을 끌고 있다.

14일 광주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동구 용연정수장에 30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지난 8일부터 직접전력거래계약(직접 PPA) 방식으로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17일 상수도사업본부가 전력효율을 높이기 위해 빛고을시민햇빛발전 사회협동조합, 현대건설과 함께 체결한 ‘용연정수장 유희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직접 PPA 발전 협약’으로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오는 2035년까지 10년간 ‘태양광 발전사업(빛고을시민 용연PPA 햇빛발전소)’을 진행한다.

빛고을시민햇빛발전 사회협동조합은 발전사업자로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유지·관리하며 전기를 생산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발전소 설치를 위한 부지를 제공한 후 생산된 전력을 활용하고, 현대건설은 전력 거래를 담당한다.

빛고을시민햇빛발전 사회협동조합



합은 이를 위해 공사비 3억4000만원(보조금 1억7000만원, 자부담 1억7000만원)을 투입, 지난해 용연정수장 내 유희부지 1442㎡(약 436평)에 30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마쳤다.

최대 사업 기간은 30년으로, 10년 이내 범위에서 최대 두 차례까지 사업을 갱신할 수 있다. 갱신 때는 상수도사업본부와 민간사업자 간 사전 협의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존 태양광발전은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방식이지만, 직접 PPA 방식을 사용하면 전력 사용자가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한전 송·배전망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직접 생산·공급해 계통 안정성과 전력효율을 높일 수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김문수, ‘1의대·2캠퍼스·2병원’ 통합형 모델 제안

“전남대·서울대 사례로 검증… 정부 협력 필요”

김민석 총리 “중장기부도 최선 해결책 찾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이 13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국립 전남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해 ‘1개 의대, 2개 캠퍼스, 2개 부속병원’ 통합형 모델을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전남 의대 신설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이다. 전남 동부와 서부 간 갈등을 해소하면서 의료공백을 동시에 메우기

위해서는 단순 신설이 아니라 통합형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런 제안을 밝혔다.

김 의원은 “병원을 2개 이상 운영하고 있는 곳은 국립의대 10개교 가운데 부산대 경북대 등 6개교”이라며 이미 검증된 모델을 바탕으로 정부가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들 중에는 병원 건립에 지자체가 재정지원하는 경우(시흥시 587억 원, 군산시 404억 원)와 기존 공공병원을 활

용(강원대와 제주대는 의료원 인수)한 사례가 있다”며 “이를 참고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순천시·목포시 등 지자체들과 힘을 합쳐 정부가 병원 2곳 이상 건립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의대가 2곳인 경우도 있다며 근거로 전남대학교 사례를 들었다.

김 의원은 “전남대는 광주와 화순 두 지역에 의과대학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1년차엔 광주 용봉캠퍼스에서 교양과목을 이수하고, 2~4년차엔 전남 화순캠퍼스에서 기초 및 전공교육을 받으며, 5~6학년엔 광주 학동캠퍼스에서 임상실습을 진행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나의 의대 체계 아래 복수 캠퍼스와 병원을 운영하는 방식은 이미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서울대학교, 순천향대, 연세대 등의 사례를 언급했다.

서울대는 1~2년차는 관악캠퍼스에서 교양·기초과학을 이수하고, 3~6년차는 연건캠퍼스에서 전공 및 임상교육을 받으며 종로와 분당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임상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한 쪽에 의과과, 다른 쪽에 의과과를 두는 방안, 국립대병원을 2개 두는 방안,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병원을 건립하는 방안, 기존 공공병원을 활용하는 방안, 양 쪽에 의대를 두는 방안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총리는 “정부도 지혜로운 해결을 위해 최선의 해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이소영 기자 soley235@

시, 영유아 성장발달 지원 확대

광주시는 영유아 발달지원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영유아 발달 컨설팅 지원사업’을 2세까지 확대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어린이집 재원 3세 아동들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사업 추진에 대한 현장 만족도 조사 결과, 지원 대상 확대와 다국어 서비스 제공, 상담치료 연계 강화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는 올해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3세에서 2세까지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상은 2022~2023년생으로 넓어지고, 수혜 인원은 9000여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양동민 기자 yang00@

“통합예산지원·의원정수 확대해야”

진보당 광주출마자들 촉구

진보당 광주지역 광역단체장·의원 출마자들이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통합예산 지원과 의원정수 확대를 촉구했다.

진보당 이종욱 통합특별시장 후보와 김태진·소재섭·국강현·김선미·박미경 특별시의원 후보들은 14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특별시의 성공은 초기 행정과 정치의 융합이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는가 관건”이라며 마중물 예산과 의원 증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통합 준비에 필요한 예산 573억원이 이번 추경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자선책으로 해당 예산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할 것을 이재명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예산은 정보시스템 통합과 안내표지판과 공공시설물 정비, 3개 청사 제재치 등 통합 초기 필수비용이자 행정공백을 막고 통합의 기초를 놓는 필수 예산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들은 “통합시의회의 불균형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고 비례의원 정수를 늘려야 함에도

국회가 특별법 관련 조항을 무시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법을 뒤엎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명만 뽑던 광주 광역의원 선거구에서 2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 현재 20명에서 40명으로 늘리고 비례의원 정수를 10명으로 확대해 광역의원 총 50명으로 선출해 시·도 간 정치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계층과 세대의 목소리가 통합시의회에서 반영될 수도 최대 의회의 구조를 튼튼하게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 “호남에서 보여주시최고위원회의만 열지 말고 호남의 민생과 정치적 현안에 거대 집권여당이 책임감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산하 기자 goback@

전남농기원, 스마트농업 확산 AI 기술 개발

환경제어 시스템 개발 사업

전남도농업기술원이 중소농가의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환경제어 기술 개발에 나선다.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행란)은 농촌진흥청, 대학, 농업전문기업과 협력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농업 빅데이터 기반 AI 연계 환경제어 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와 농업 노동력 감소, 생산비 상승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경험 중심의 재배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정보 AX(농업 전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2019년부터 환경·생육·경영 데이터를 수집해 농업 빅데이

터를 구축해 왔으며, 이번 사업에서는 이를 활용해 AI 분석과 환경제어 기술을 결합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온도·습도·일사·이산화탄소 등 환경 데이터와 초장·엽면적·작과 등 생육 데이터, 관수·환기·양액 공급 등 제어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다. 이를 기반으로 작물 생육과 수량을 예측하는 AI 모델도 개발한다.

또한 분석 결과에 따라 환기, 관수, 양액 공급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지능형 환경제어 시스템과 모바일 기반 모니터링, 데이터 기반 영농 컨설팅 기능을 포함한 디지털 농업 AX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시범농가를 중심으로 현장 실증을 추진하고, 기술 표준화와 상용화를 통해 보급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